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0.18.(일) 11시:00 이후(10.19.(월) 조간) / 배포 : 2026. 10. 16.(금)

공공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...
불법하도급 단속·체불해소 전방위 확대

- 「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」 경상권 75개 민간현장 집중단속
- 공공현장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·자진신고로 감경제도 운영

□ **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**는 **대한건설기계협회** 등과 함께 구성된 **「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」**을 통해 지난 5월 수도권 집중단속에 이어 **10월 19일부터 11월 13일**까지 **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개소**를 대상으로 **집중단속**을 **실시**한다.

○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「**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**」의 일환으로,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**민간 건설현장까지 단속범위를 확대**하였다.

○ 앞서 국토교통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·신고 공공현장 275개소를 선정하고,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인력 등 **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**와 함께 **민간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**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도 **제1차관**을 **단장**으로 하는 「**건설현장 체불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**」을 구성하여 **수도권 건설현장**을 대상으로 **집중점검**한 바 있다.

○ 당시 수도권 집중점검을 통해 **불법하도급 29건** 및 **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**을 **적발**하고, **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125.8백만원**을 **해소**하였다.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집중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**단속역량을 경상권으로 집중**하여 **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**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**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**와 **현장 단속**을 **적극 연계**한다.

○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**접수된 신고현장**과 **대금체불 현장**을 이번 **집중단속 현장대상에 포함**하여, 신고내용과 실제 시공실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현장 근로자가 **불법하도급을 보다 쉽게 신고**할 수 있도록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**신고 정보무늬(QR)**와 **대표전화 1577-8221**이 포함된 **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**를 점검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.

〈 신고포스터 〉



〈 카드뉴스 〉



□ **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**은 "**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**에서 **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의 성과**를 **확인**한 만큼,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**경상권에 집중**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**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**을 **면밀히 살펴보겠다**"고 밝혔다.

○ 아울러 "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**불법하도급 근절**에 나선 데 이어 **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**하고, **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**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**자진시정도 함께 유도**하여 **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**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한동균	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	문채빈	(044-201-3541)
			사무관	김종현	(044-201-3572)
			주무관	설수연	(044-201-3511)
			주무관	박수진	(044-201-3508)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성환	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임희엽	(044-201-3542)
			주무관	박민수	(044-201-354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TOMORROW

붙 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포스터



* AI 생성

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0. 7.(수) 11:00 이후(10. 8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10. 7.(수)

10.12~12.31「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」운영

- 국토부·10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공공현장 275곳 집중단속
- 불법하도급 신고 현장 연계 → 과징금 10억원 부과시 포상금 최대 3억원
- 집중단속기간 내 자진신고·시정 시 법령상 요건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

□ **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10월 8일 14시** 오송역 인근 **평택~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** 현장사무실에서 **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**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**10개 공공기관*과 「국토부·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-Off 회의」를 개최**한다고 밝혔다.

*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서울교통공사

○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'**10.12일부터 12월 31일**'까지 **집중단속 기간**을 운영하기로 하고, 해당기간 내 10개 공공기관의 점검대상과 인력·일정 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.

○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 등을 활용하여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**총 275개를 선정하고** 국토부와 공공기관의 인력 **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**하여 점검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**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**를 위해 **신고포상금 제도**와 **현장단속 연계**를 추진한다.

○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**접수된 신고**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곧바로 **현장점검을 실시**,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**운영할 계획**이다.

○ 특히,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**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**하고 **포상금 상한을 폐지**하는 한편, **과징금 규모**(최대 30% 이내) **등을 고려하여 포상금*이 지급**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
* 例)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신고 건은 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가능

□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**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**하고,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**행정처분을** 2분의 1 범위 내에서 **감경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○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9월 개정되어 '27년 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,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**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**하고 **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**에 대해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.

□ **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**은 "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·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**공공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**"는 점을 강조하며,

○ 아울러, "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·단속을 활성화하고,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**신고·단속·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**를 만들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	책임자	과 장	한동균	(044-201-3518)
		담당자	사무관	문채빈	(044-201-3541)
			사무관	김종현	(044-201-3572)
			주무관	설수연	(044-201-3511)
			주무관	박수진	(044-201-350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MOVE i TOMORROW